



효력시험 안하면 FMD 소독제 불허

검역원, '소독약품 효력시험 방안' 마련
기존 미시험 제품 명단서 빼 시험실시 유도
현장 사용 혼란 방지...국내 시험도 추진

앞으로 FMD 효력시험을 하지 않으면, FMD 소독제로 허가가 불가능해 진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FMD 등 소독약품 효력시험 방안'을 마련해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업계에 알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규 소독제 허가시 FMD 효력시험을 해야만, FMD 효능·효과가 인정된다. 기존의 경우, 효력시험 없이도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성분 등이라면 FMD 효능·효과를 표기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제제라고 하더라도 효력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용법·용량 표기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효능·효과는 있지만, 용법·용량이 없는 FMD 소독제가 시중에 나돌았다.

김명수 검역원 동물약품관리과 사무관은 “용법·용량이 없는 FMD 소독제로 인해 방역현장에서는 사용상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용의 불편함을 덜고, 보다 효과있는 소독제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역원은 이미 허가돼 있는 FMD 소독제의 경우, 효력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효능·효과 표기를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원 홈페이지의 FMD 소독제 명단에서 제외하고, 시도 등에 통보해 효력시험 실시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검역원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FMD 소독제 공동 효력시험에 대해 성적서를 검토해 오는 10~11월경 허가사항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공동실험에는 30여개사, 80여 품목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미 허가변경한 26개 품목까지 합치면, FMD 효력시험을 한 소독제는 110여 품목에 달하게 된다.

아울러 검역원은 앞으로 검역원 내에서 FMD 효력시험을 한다는 중기과제를 세우고, 시험방법, 검사인력, 장비, 수수료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23일



3개 검역기관 통합 '수' 싸움에 한발 늦춰질 듯

고위직 포함 인력충원 문제 놓고 부처간 이견...내달 중순 이후로
'동약관리·평가과', '세균·바이러스과' 통합은 없을 듯

3개 검역기관 통합이 6월 중순 이후로 한발짝씩 늦춰질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6월 초 통합기관 출범이 예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통합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빨라도 6월 중순 이후에나 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부처간 협의의 골격은 인력충원과 고위공무원 수. 검역원측은 “행정지원 등 공통분모 인력을 현장 방역, 검역 업무로 재배치한다고 해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50여명의 충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과 영남지원의 경우, 3개 기관 지원이 합쳐지게 된다면, 인력 수가 꽤 많고 역할도 상당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 진두지휘해야 한다. 현재 3개 검역기관의 고위공무원 6명 외 2명의 고위공무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측은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이끌어내려고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다. 인력만을 늘리려고 한다면, 통합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합논의 과정에서 흘러나왔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약품관리과와 동물약품평가과’, ‘세균과와 바이러스과’ 통합은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논의 초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름과 특성이 비슷해 보이는 과끼리 ‘통합이 가능하냐’라고 제기됐을 뿐이다. 업무와 전문성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수긍해 이제는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비껴갔다”고 전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18일



한국 양돈산업 새역사 쓰자

2012 IPVS 제주대회 성공 개최 '조직위' 출범

내년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2012 IPVS 코리아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지난 1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조

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와 더불어 앞으로 행사계획 등이 소개됐다. 특히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IPVS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조직위에는 이원형 위원장을 비롯해 박봉균 학술위원장, 박최규 학술부위원장, 강화순 사무총장, 정현규·김경진 재무재정위원장, 정성대·김돈환 의전위원장 등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양돈수의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2012 IPVS 코리아는 내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Happy Pigs-Healthy People’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키노트 강연,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양돈산업과 질병 동향을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원형 위원장은 “3천명이 넘는 세계 양돈관계자들이 2012 IPVS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준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양돈인들에게 한국양돈의 위상을 강렬히 심어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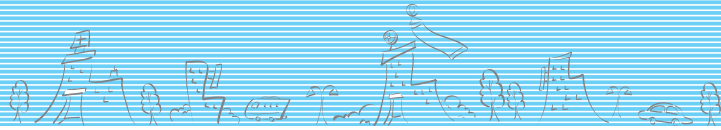
 **“FMD 불씨 남아…청정화 포기 못할 가치”**

+ 최악 FMD 사태에 대한 현장 수의사들의 시각

“바이러스가 숨어있다가 다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자돈에도 2회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FMD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3개 검역기관 통합은 무늬만 방역강화일 뿐 이다”. 양돈현장 수의사들이 바라보는 FMD는 방역당국과 달랐다. 확연히 차이가 났다.

양돈수의사회 포럼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분리주 사용·자돈 2회 백신 접종 필요”
3개 검역기관 통합 “무늬만 방역강화” 지적

지난달 14일 충남대 수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양돈수의사회 정기포럼.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고, 특히 수의사들은 FMD에 대한 생각을 설문지에 솔직하게 담아냈다. 설문에는 총 51명 수의사가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여행을 한 축산농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방역당국 설명에 대해 양돈수의사 33명은 “상황만을 짜맞췄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정확한 조사이다”에는 한명도 손들지 않았고, “가장 가능성 높은 추정이다”에는 16명만이 응했다.

“강화, 포천 등 FMD 바이러스가 잠복했다가 다시 나타난 것”에는 14명이 표를 던졌고, “새로 유입 되기는 했지만, 베트남 여행이 아닌 다른 경로로 보여진다”에도 15명이 찍었다.

전국 확산원인(중복 대답)으로는 안동에서의 초동방역 지연(48명), 군병력 미동원 등 살처분 능력 대응(46명),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정책(41명), 추운 날씨에 의한 소독력 저하(34명), 축산관련 차량 통제 실패(33명), 시기를 놓친 백신 정책(32명), 양축농가의 방역의식 부족(18명), 통제되지 않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들(15명) 등이 제기됐다. 수의사 활동구역내 “FMD가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3농가 이상(14명), 1~2농가(13명), 전혀없다(12명), 모르겠다(12명) 등으로 집계돼 여전히 FMD는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수의사가 많았다.

특히 “3월 이후 FMD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던졌더니 무려 39명이 “아니다. 훨씬 줄긴 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FMD는 계속 나오고 있다. 신고만 안될 뿐 이다”고 해 충격을 줬다.

FMD 청정화에 대해서는 “백신 미접종 비발생 청정국”에 22명, “백신접종을 통한 청정국 지위회복”에 27명이 답해 결국 “청정국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의견을 모았다.

국내 분리주를 사용한 백신제조의 경우, “절실히 필요하다”는 27명, “굳이 그럴 필요없다” 10명, “경제적 비용을 따져서 현재 백신을 써야한다”는 7명으로 집계됐다.

자돈의 1회 백신접종과 관련, 34명 수의사들은 “질병방어에 문제가 있다. 당분간 2회 접종해야 한다”에, 11명은 “계속 2회 접종해야 한다”고 응해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신접종 기간을 두고서는 “접종 3~4년 후 상황에 따라 중단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6명, “1~2년 후 중단해야 한다” 11명, “수출국이 아니므로 계속해야 한다” 6명 순으로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중 3개 검역기관 통합의 경우,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방역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32명, “장단점이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15명으로 조사돼 방역기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선진화 방안에 보강할 내용(중복 대답)으로는 “방역 담당 공무원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 20명, “현장 수의사 역할 강화” 19명, “지방 및 중앙 방역조직 일원화” 16명, “축종별 공수의 업무 개선” 13명, “살처분시 군병력 동원 법제화” 11명 등이 거론됐다. 김경진 양돈수의사회 총무는 “이번 설문 내용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지라도 현장에서 직접

FMD를 겪고 고민한 수의사들의 견해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방역정책 수립과정에서 현장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11일

FMD 초기 방역시스템 정비 시급

✦ 전염병예찰협의회서 제기...살처분 범위 조정 지적도

지방방역 개선 한목소리

FMD 재발을 막으려면, 초기대응에 대한 방역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시 거론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일 안양소재 본원에서 ‘1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열고, 가축질병 발생과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FMD 이후, 방역시스템 개선방안을 두고, 다양한 현장의견이 오갔다.

이날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FMD의 경우,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질병을 진단해 내기가 쉽지 않다. 수의사들이 초기증상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종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방역팀장은 “이번 FMD를 돌아봤을때 조기신고, 신속진단, 초기제압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방역관의 초기 판단착오가 화를 불렀다. 방역인력을 확충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방역 업무에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은 “국내 질병 진단기술은 8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질병이 의심되면, 검역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것이 간과돼서 질병확산 단초를 제공했다”며 조기신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회에서는 △공동방제단 용역 △백신 월단위 공급 △백신용기 세분화 △겨울전용 소독약 개발 △살처분 범위조정 △축사 입구 도로 소독집중 등이 개선방안으로 건의됐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9일



FMD 후유증...김 빠진 돈열 청정화사업

✦ 농식품부, FMD 방역상황 감안 127억원 규모 올해 마커백신 공급 유보

실망한 백신업계 “연기됐을 뿐” 자위도

“내심 기대가 컸다.” FMD 후유증이 동물약품 백신업계에 몰아치고 있다.

127억5천만원. 올해 돼지열병 마커백신 구입비용으로 잡혀 있는 가축질병 방역예산이다. 5개 국내 백신메이커가 나눠먹기식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한 업체당 대략 25억원씩은 떨어질 수 있는 큰 금액이다. 백신메이커들은 각각 연구실험비, 시설투자비, 시제품을 만드느라 수억원씩을 썼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비를 건질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실시기로 했던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MD 발생에 따라, 청정화 사업 일정이 한발짝씩 미뤄졌기 때문. 농식품부는 FMD 방역상황을 감안해 박멸위원회 의견을 거쳐 마커백신 투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때 시범적이거나 일부 도단위로 올해 마커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FMD 영향이 워낙 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돼지열병 생독백신 접종은 이어가기로 했다. 마커백신 예산 중 일부는 여기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커백신은 청정화 사업의 핵심무기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올해부터 2~3년간 마커백신을 통해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 감별을 실시하면서 돼지열병 양성축을 색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FMD가 일정을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백신업계는 “FMD가 있다고 해서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연기됐을 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실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항원량, 부형제 기준 등 효능을 보강하기 위한 마커백신 실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마커백신은 허가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검역원은 지난달 제주대 김재훈 교수를 용역주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한 백신업계 관계자는 “여러 실험을 통해 보다 완벽한 백신이 탄생했으면 한다.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양돈농가들이 질병걱정을 훌훌 털어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4일



기자수첩 / 선거를 보는 재미와 기대

선거는 꽤 즐길만한 이벤트다.

공약이 적혀있는 포스터를 읽는 것도,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플래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도 한 재미다. 후보의 연설을 듣고, 그들을 평가하는 맛도 제법 쏠쏠하다. “누구를 찍을까” 동료들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 역시 빼먹기는 아깝다. 투표당일, 그 엄숙하고 진지한 개표분위기는 기다려지는 한 장면이다. 득표 수가 나오고, 순위가 바뀔 때면, “정말 이리다가”라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오곤 한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들이 시장 등을 찾아가 서민들과 악수를 하고, 그들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게 가장 인상적이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내가 여러분 애로를 풀어주고, 앞으로 더 잘 살도록 이끌 유일한 사람”임을 호소한다.

선거 때가 아니고, 평상 시에도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스쳐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진풍경이다.

시끌시끌 4. 27 재보선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가 치뤄졌다. 그것도 4명의 후보가 나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수의사회 사상 처음 경선이다보니 아무래도 ‘비방’, ‘편가르기’ 등 선거후유증이 걱정될 만 했다. 하지만, 별탈없이 흘렀고, 마무리됐다.

오히려 얻는 것이 많았다. 우선, 대의원 137명 중 한명만을 뺀 136명이 참여, 그야말로 경이적인 투표율을 보였다. 경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수의사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약사항을 눈여겨볼 만 하다. 후보들은 현장을 돌며 주어진 ‘과제’와 ‘대안’을 내놨다.

선거가 없었다면, 그냥 묻힐 수 있었던 ‘애완동물 부가가치세 부과 반대’, ‘수의사회 당연가입 추진’, ‘가족공제제도 도입’ 등이 다시 불거졌고, 해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수의사 신용협동조합 설립’, ‘동물복지 자조금 도입’ 등 다소 생소하지만, 설득력있는 약속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안팎으로 단결과 협력, 포용 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이번에 첫 출항한 대한수의사회 “김옥경호”가 이러한 험난한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된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5월 2일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취임

✦ 수의계 발전 · 수의사 권익 신장 강조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6일 분당 소재 만강홀에서 제23대 김옥경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신임 김옥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님들의 업적을 잘 이어서 대한민국 수의계를 발전시키고 수의사의 권익을 신장해야 하는 회장으로서의 소임에 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 수의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후보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선거 시의 공약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후보 당시 선거 공약에서 수의사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진료 시장 활성화 및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동물병원 경영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일만 오천여 수의사 회원들이 동물진료, 방역 및 검역, 공중보건, 식품안전, 동물 복지, 수의학연구 등 각 분야에서 묵묵히 우리의 책임을 다해 왔으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방역을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금부터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과 각 분야 수의사들의 처우개선을 회장으로서의 소명으로 여기고 수의사의 각 분야별 업무는 담당 부회장이 책임지고 추진토록하고 회장은 대국회 등 외부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축산관련단체장,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계 원로, 수의축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신임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20일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에 영향 없다”

✦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안티 VS 2 주사’ 검역원 실험결과

투여 시 구제역 백신과의 간섭현상으로 백신 항체가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야기했던 (주)삼양애니팜(대표이사 민필홍)의 백신스트레스 완화제인 ‘안티VS 2 주사’가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출시돼 현장에 공

급됐던 ‘안티VS 2 주사’는 제품의 기술상 구제역 백신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일부에서 구제역 백신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혼용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대립각을 이루며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실험에 나선 결과 결국 ‘안티VS 2 주사’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주도한 검역원 바이러스과 현방훈 박사는 “실험결과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사용한 농가와 사용하지 않은 농가의 항체가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현 박사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 시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와 구제역 항체가 형성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경북 김천, 경남 거창, 전남 해남 3농가에서 대조군을 두고 실험 조사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면역형성의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구제역 항체 형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또한 완화제 사용군에서의 특별한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 박사는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최근의 구제역 백신은 물론 이전에도 백신 접종 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의 백신에 이미 약 200만 두분 이상이 실제로 사용돼 안정성이 입증됐다”면서 “생백신과 불활화백신 모두에서 접종용 첨가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양애니팜 관계자는 “‘안티 VS 2 주사’ 출시 후 구제역과 관련된 실험은 하지 못했지만 기존에 허가를 획득한 돼지열병 백신, 돼지열병·돈단독 혼합 백신, TGE·PED 불활화 백신 같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오일 백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이번 실험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삼양애니팜은 ‘안티 VS 2 주사’를 구제역 백신에 혼용 첨가할 수 있도록 추가 허가를 진행 중이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로 범위를 확대시켜 임상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20일

 **‘IPVS 2012 KOREA(세계양돈수의사대회)’ 조직위 출범**

✦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성공적 개최 다짐

IPVS 2012 KOREA(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조직위원회(위원회 이원형)가 지난 16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준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원형 조직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IPVS 2012 KORE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양돈산업시장을 가진 아시아에서 16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양돈산업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이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양돈산업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개최된 뜻 깊은 대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 박봉균 IPVS 2012 KOREA 학술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Happy Pigs-Healthy People’ 주제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열리는 사교 행사와 볼거리가 풍성한 투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IPVS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양돈수의사대회로 전 세계 양돈 수의사들이 모여 주요 질병과 이슈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학문교류의 자림임은 물론 전세계 양돈업계 종사자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6월 10일~1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양돈수의사대회는 역대 대회 대비 최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참가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수의 축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20일



유정복 장관 명예수의사 추대

+ 농수축산업 발전에 헌신 공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수의사가 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지난 16일 열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명예수의사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사회를 마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을 방문해 명예수의사패를 전달하면서 그 동안 수의 및 농수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복 장관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한 오남용이 우려되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 주의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도 도입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식품안전체계 및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정책수행과정 중 수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의사와 같은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점도 인정받아 명예수의사로 추대됐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20일

 **“구제역 방역 정치적 논리가 우선됐다”**

+ 양돈수의사 5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번 안동발 구제역 상황에서 긴급 조치된 방역정책이 수의학적 이론보다 여론과 정치적 논리가 우선한 정책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정성대)는 최근 전국의 양돈수의사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구제역 사태에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긴급 조치한 방역정책이 어떠했나(수의학적 논리인가? 정치적 논리인가?)’ 라는 질문에 78%인 40명이 ‘수의학적 이론보다 여론과 정치적 논리가 우선한 정책으로 문제가 많았다’ 고 답했다.

반면 수의학적 논리가 ‘충분히 반영됐다’ 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나머지 22%인 11명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수의학적 이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국양돈수의사회는 결국 이번 구제역 긴급 방역정책은 수의사의 과학적 논리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져 문제가 많았다는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안동발 구제역이 베트남 여행을 한 축산농가를 통해 유입됐다고 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33명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상황만을 짜맞춘 신빙성이 낮은 결론이다’ 고 답했고 이어 16명이 ‘정확하진 않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추정’ 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답변이 두배 가량 많이 나타났다.

이어 ‘최근 발표된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선진화 방안이 잘되었다고 보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86%인 43명이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으로 답했고 7명만이 ‘양호하다’ 고 답했다.

특히 ‘축산업 선진화 방안내용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을 통합,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가축방역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질문에 92%인 47명이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 가축방역기능이 약화될 것' 이라고 답변했고 4명만이 '개선될 것' 이라고 답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13일

“안동 구제역, 강화 바이러스 토착화 아니다”

수위과학검역원,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서 주장



▶ 지난 3일 개최된 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에서 이주호 검역원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동발 구제역이 이전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토착화 됐을 것이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국립수위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이 '근거 없는 사실' 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안양 검역원 본원 대강당에서 검역원 수위전문가들과 시·도 수위축산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에서 검역원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검역원 조인수 해외전염병과장은 '안동발 구제역이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토착화 된 것이 아니냐' 는 참석자의 질문에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을 박았다.


조 과장은 "강화발 구제역이 최종 발생된 시점(천안)과 안동에서 최초 발생된 시점은 6개월의 터울이 있다"면서 "강화발 구제역의 경우 최종 천안에서 발생한 후 전국 3000농가 2~3만두의 가축을 정밀검사해 바이러스 소멸을 확인했다. 구제역의 특성과 전염병학적으로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발생을 모르고 지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특히 강화발 구제역의 최종발생 이후 OIE로부터 구제역청정국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호 검역원장은 "일부 비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유포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검역원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구제역 진단기능 지방 이양 반대 △수의전문조직 강화 및 인재양성 △초기진단 임상 수의사 교육 강화 △구제역 소독제 효력 및 사용에 대한 현장 실무자 교육 실시 △구제역 백신 소량(10두분) 포장 생산 △염소·사슴 예방접종 실습비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춘 SOP 개정 △이온수의 구제역 효력 시험 실시 등의 건의 및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6일

 **신임 김 옥 경 대한수의사회장**

+ “수의사 권익 향상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터”

대한수의사회 제23대 회장에 김옥경 후보(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김옥경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 대의원투표에서 2차 결선투표 끝에 대의원 136명 중 55.8%인 76명의 지지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정부의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회원들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겠으며 반려동물진료분야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수의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패러다임 재구축 등 대한수의사회의 현안문제 해결과 수의계에 비전을 제시해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944년생으로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농림부 축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신임 김옥경 회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대한수의사회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선거 공약을 통해 수의사가 전문가로 대우받는 환경조성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 ▲수의전문가들이 앞장서고 힘을 합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을 근절해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방역 패러다임을 반드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림수산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수의조직을 수의국이나 동물방역청으로 확대개편하고, 수의전문인력을 중앙과 지방에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을 상근화하고 수의전문조직으로 재편해 임상수의사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와의 업무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서와 같이 임상수의사 및 공직수의사들이 질병근절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구제역의 역학 등을 종합 검토해 상황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구제역 백신 접종정책과 살처분정책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축산농가의 의식대전환을 위한 방역 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 이 같은 패러다임 재구축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 동물병원의 경영안정을 위한 동물진료 활성화를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가축진료비가 포함된 가축공제제도를 도입(일본실시중)하거나 작년 충남 아산시에서 실시한 소 진료비 보조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가축진료비 보조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토록 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산업동물진료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반려동물병원에 대한 대기업진입제한을 위해 수의사법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애완동물진료의 부가가치세 부가제도의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로 동제도의 불합리성을 관련단체와 협력, 널리 홍보해 시행을 연기하거나 폐지되도록 추진하겠다.
 또 현재 소동물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체의약품을 인체약국에서만 구입하게 돼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의약품협회와 협의해 도매구입을 추진하는 등 인체의약품의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 수의사 영역 확대를 위한 동물복지 및 축산식품안전업무 등의 참여 및 확대 복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2000년대부터 수의사업무에 동물복지를 6대 중점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해 개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동물 복지 축산식품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므로 동물복지 업무에 수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개발한다면 수의사영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테마파크나 복지문화공간 마련, HAB 등 반려동물보호와 복지를 통한 인간의 정서함양사업을 추진하겠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추진하는 축산식품HACCP컨설팅트, 도축과 도계 등 축산물검사, 동·축산물에 대한 관리수의사분야 등에 수의사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

- 수의사회 당면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의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 조기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처방제는 수년간 추진해 온 수의사들의 숙원사업으로 도입 후 원활한 시행으로 조기 정착 후 수의사처방약품을 대폭 확대해 자가 진료를 축소시켜 동물진료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앞으로 제주에서 개최될 계획인 세계소동물수의사회 세계대회 (WSAVA World Congress)와 세계양돈수의사회 세계대회 (IPVS World Congress) 를 적극 지원해 원활하게 추진하므로 한국수의사의 국제적 위상이 도약되는 계기를 만들겠다.

또 한수약품에 대한 업무를 조사 분석해 창설 취지에 맞게 운영을 개선하고 대한수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불법진료 근절과 진료에 관한 법적분쟁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수의사들의 각종모임을 활성화해 수의사들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대한수의사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30여년의 수의관련정책 업무추진과 수의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공직경험과 8년여의 수의관련 업계 경험 그리고 10년 이상의 수의학계 강의경험을 토대로 하여 수의사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전국 수의사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빌려주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5월 6일



‘동물방역위생청’ 신설 필요하다.

질병방역과 검역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물부 차원에서 수의과학검역원과 지자체의 방역위생 기능을 통합한 가칭 ‘동물방역위생청’의 신설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



검사원 등 3개 검역기관을 통합기로 한 안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43개소를 통합해 가칭 ‘동물방역위생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이 창궐하는 최대 위기에 정작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 방역조직개편에서는 역량이 퇴보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3개 검역기관의 물리적 통합이 종용되고 있어 전문성이 훼손되고 악성 질병 대처에 효율성 저하만 가중 시킬 뿐 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농림수산물부 차원에서 질병 방역위생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물방역위생청’ 신설하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현 조직은 그대로 두되 방역과 검역만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지방 방역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 ‘가축위생시험소법’을 제정·운영해 시·도 동물위생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측은 이 밖에도 지자체 방역 행정조직을 확대·개편해 중앙방역기관의 실질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시·도에 방역위생과 신설과 함께 시·군 단위에 방역위생계를 뒤 일선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5월 3일



〈집중분석〉why?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부과반대

애완동물 진료비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개정안은 40여개 동물관련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를 제외한 모든 동물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과연 무엇이 문제고 반대를 위한 움직임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집중 분석해 본다.

#애완동물 치료가 쌍꺼풀 수술과 같나?

현재 인체 치료항목에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성형외과 5개 항목으로 코성형술, 쌍꺼풀 수술, 유방축소·확대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으로 한정돼 있다. 동물관련단체들은 아픈 동물에 대한 필수치료를 사람의 쌍꺼풀 수술과 같이 취급한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물관련단체의 한 관계자는 “2006년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400여만 세대 중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로 특히 36%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에게 반려동물 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 부담 가중으로 유기견을 양산시키라고 증용하는 꼴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실물경제가 위협을 받았던 2008년 약 8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졌고 정부에서 이들 유기동물의 처리에 소요된 정부예산은 약 82억원이었다.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처리비용도 문제가 되겠지만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시골에서는 쓸쓸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가뜰이나 반려동물의 치료를 꺼리는 입장에서 치료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치료자체를 거부하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데다 치료나 예방접종을 꺼리게 되면 이후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동물의 자가치료가 성행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가세 부과는 비수의사에 의한 동물진료를 성행시켜 자칫 불법 동물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에서 일반인까지 반대목소리 높아

현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비롯해 한국애견협회, 한국동물복지협회 등 동물관련단체를 비롯해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3곳, 대한수의사회를 위시한 각 시도별 수의사회 등 40여 개 단체가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동물 보호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제도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2009년 한 방송사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65%가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반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 연대가 실시하고 있는 부가세 철회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인원도 수일만에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일반시민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 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18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부과세 철회 혹은 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3000여개 동물병원에서도 일반시민이나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강종일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이 서명을 모아 청원서와 함께 5월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려동물진료비 부가세 부과 계획은 시기상조인만큼 반드시 연기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4월 27일